

日本總選 結果分析

1996. 10.

金 永 椿
(國際研究室 研究委員)

民族統一研究院

-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.
-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.

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

- 目 次 -

I. 問題提起	1
II. 總選 背景과 特徵	2
1. 總選 背景	2
2. 總選 特徵	3
III. 投票結果 分析	7
IV. 하시모토 2次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	10
1. 向後 政局 展望	10
2. 對內政策 展望	11
3. 對外政策 展望	13
V. 韓國의 考慮事項	16

I. 問題提起

- 1993년 7월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이라는 국민의 여망속에서 38년 동안의 자민당 장기집권체제가 붕괴되었으나, 그 결과는 '선거없는' 4차례의 정권교체였음.
 - 자민당을 비롯한 8개 정당 등의 연립으로 구성된 호소카와(細川護熙)·하타(羽田 孜) 내각과 자민·사회당 연립의 무라야마(村山富市) 내각, 그리고 하시모토(橋本龍太郎) 1차 내각에 이르기까지 과도기적 형태의 불안정한 연정 상태가 지속되었음.

- 10월 2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47년 이후 지속되어 온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병립체로 대체한 이후의 첫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.
 - 소선거구제는 이권과 직결되는 자민당내 파벌정치를 청산하고 정당 및 정책중심의 '청결한 선거'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음.

- 특히 총 보수화 속에 실시된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적극적인 영토 공약과 관련, 어느 때보다 한국, 중국 등 주변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는 바, 본 보고서에서는 선거의 배경과 특징, 각 정당의 전략과 공약 등을 분석하여 하시모토 2차 내각의 대내외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하고자 함.

II. 總選 背景과 特徵

1. 總選 背景

- 금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1993년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와는 다른 정당간 이합집산으로 정권 틀이 바뀌고 총리도 각각 다른 정당에서 4명이나 나오는 등 불안정한 정계구도가 배경이었음.
 - 지난 1955년 등장한 보수합동 자민당과 혁신통합 사회당(현 사민당)의 보혁대결 아래 자민당이 38년간 장기집권해 온 이른바 '55년 체제'는 1993년 총선에 의해 마감되었음.
 - 1993년 총선에서는 국제적 냉전종결 이후 보혁대립이 의미를 상실하고 집권당의 과벌금권정치가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킴으로써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획득에 실패하고 사회당도 더욱 약화되었으며, '55년 체제'를 대체할 새로운 정당체제도 완성되지 않았음.
 - 1993년 총선 직전 자민당에서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(小澤一郎) 세력과 사회당을 비롯한 8개 정당이 총선직후 자민 연정을 출범시켰으나, 연정은 정당간 불화로 11개월만에 붕괴되었음.
 - 자민당이 재차 오랜 숙적 사회당 및 사키가케와 연립 정권을 구성, 오늘에 이르렀음.
- 금번 총선은 1993년 총선 이후 정당간 이합집산에 의해 교체되어온 연립정권의 틀을 또 한번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.

2. 總選 特徵

- 금번 중의원 총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전후 최초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임(<표 1> 참조).
 - 유권자들은 선거구 입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각각 기표(두번 기표)함으로써, 소선거구에서 최대 득표자 1명씩 300명의 당선자를 뽑고 비례대표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200명을 선출함.
 - 비례대표는 우리 나라의 전국구 개념과는 다르게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이 7~33명씩 제출한 입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정하게 됨.

<표 1> 日 중의원 新·舊 선거제도의 비교

	新	舊
선거제도	소선거구, 비례대표병립(1개 선거구에서 1명선출, 비례는 전국 11개 그룹별로 나누어 각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원 선출)	중선거구제(1개 선거구에서 2~6명 선출)
정원	500명(소선거구 300명, 비례 200명)	511명(129개 선거구)
선거운동기간	12일	14일
투표	선거구후보자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에 각각 투표(2표)	후보자 개인(1표)
정견발표	후보자를 낸 정당(9분 이내로 방송횟수는 행정구역에 따라, 또는 후보자수에 따라 다름). 무소속은 경력방송만 허용	후보자 개인(5분 30초×8회)

- 비례대표 후보명부에는 소선거구에 출마한 사람도 등재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가 허용됨으로써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음.
 -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는 비례대표제로만 나오는 사람이 우선 순위를 갖게 되며 중복입후보자들로 이루어지는 동일순위자들은 투표가 끝난 뒤 얼마나 애석하게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「석패율」(惜敗率)에 따라 순위가 결정됨.

- 한편 일본정부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정당 및 정책 중심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, 공산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'작은 정부' 실현을 중심으로 상호유사한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.

-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선거공약(<표 2> 참조)은 행정개혁과 소비세율 인상문제 등 국내과제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, 이러한 두가지 공약사항이 동시에 쟁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.

- 각 정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%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재정구조를 소득세보다는 소비세에 의존하는 형태로 개혁해야 한다며 소비세 인상을 공약화 하였음.
 - 그러나 유권자 9,700만명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4,500만명

에 불과하며, 따라서 정기수입이 없는 연금생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물건구입시 정가의 3%를 추가로 지불하는 소비세 제도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“말도 안된다”는 반응을 보임.

- 이에 따라 공산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정부부처 개편과 공무원 삭감 등 행정개혁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남발하였는 바, ‘빛좋은 청사진’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.

○결국 금번 총선의 가장 큰 문제는 각 정당이 이번 총선을 ‘21세기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’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성 있는 행정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임.

○또한 이렇다할 쟁점이 없는 외교·안보문제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하였음.

- 이는 소련붕괴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된 데다 1993년 이후 공산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여당을 경험하는 보수화에 따라 국내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<표 2> 각 당의 공약 비교

정 당	세제개혁	행정개혁	역사인식
자민당	-소비세 5% 인상 -저소득 연금생활자 특별급부금 -법인세 인하	-정부부처 22개→11개 -총리직속기구 설치	-야스쿠니(靖國)신사 공식참배 실현 -도서(島嶼)분쟁의 평화적 해결
신진당	-소비세 3% 유지 (현행대로) -소득세, 주민세 반감 97년까지 18조엔 감세 -법인세 인하	-정부부처 22개→10개 -국가공무원 25%, 고위직 관료 50% 삭감 -특수법인 원칙폐기	-과거사에 대한 반성 명시이후 평화행동 추진
민주당	-소비세 5% 인상 -소득세, 주민세 등 최고 50% 인하	-정부부처 8개분야로 재편 -국회에 「행정감시평 가위」 설치	-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명시. -자주적 외교 추진 (예를 들면, 20년후에 는 주일미군 없는 오키나와 실현)
사민당	-소비세 5% 인상은 국민합의가 전제 -21세기 초까지 재 정적자 '0'	-정부부처 특수법인 재편 -총리권한 강화	-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 반성 -비군사 국제협력
공산당	-소비세 인상저지 -대기업, 고액소득 자 우대세제 폐지	-공공사업비 연간 4조엔 이상 삭감 -미군관련 군사비 삭감	-2차대전은 침략전쟁 -헌법 9조 견지
사키가케	-소비세 5% 인상 -자산과세 적정화 -법인세 인하	-국회 「행정감시위」 설치 -정부부처 재편	-침략행위가 안겨준 고통을 반성 -비군사협력, 유엔개혁

Ⅲ. 投票結果 分析

○사상 최저의 투표율(69.6%)을 기록한 제41대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(<표 3> 참조)는 자민당 약진, 신진당 부진, 사민당 패배라는 특징을 나타냈음.

○자민당의 승리는 지난 3년동안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정권교체를 되풀이해 온 현 정치권에 불신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보다 안정된 정권을 선택한 결과로 분석됨.

- 유권자들은 결코 자민당의 부활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야권에서 자민당을 대체할 만한 안정세력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민당을 선택했다고 판단됨.

○또한 자민당의 승리는 소선거구제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- 자민당은 도쿄,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변혁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신진당과 민주당을 지지함에 따라 부진했으나 지방에서는 강세를 보여 유리한 선거전을 전개하였음.

- 반면 신진당과 민주당 등 야당세력은 지지정당이 없는 '무당파층'(약 40%)에 지지를 호소하였으나 기대이하의 결과가 나옴.

- 특히 1993년 非자민연정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무당파층이 이번에는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하고 투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야당바람이 불지 않았음.

○ 제1야당인 신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쟁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실패하였음.

- 특히 자민당의 소비세 5% 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민당 비판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이 주요한 패인으로 지적됨.

○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결성 1개월 여만에 52석을 획득 제3당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올려 1993년 선거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(細川護熙) 전총리가 이끌었던 일본신당 봄에 버금가는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
○ 공산당은 의석을 두배로 늘리는 선전을 하였음.

-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의 40%는 민주당에, 20%는 공산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던 농촌지역과 달리 신진당의 우세가 예상되었던 대도시 선거에서 자민당 비판표가 민주, 공산당에 흡수됨으로써 자민당이 반사이익을 거둔 결과가 초래됨.

○ 반면 민주당 결성으로 당이 분열된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는 의석을 잃었음.

○ 아울러 자민당내 파벌정치를 청산하고 정당 및 정책중심의 '청결한 선거'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던 소선거구제의 의도와 달리, 정책과 정당 본위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눈

에 띄지 않았으며, 지방은 대부분 인물중심의 선택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- 대다수 정치인들은 “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에 비해 두배나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하고 있어 소선거구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.

<표 3> 日 중의원 세력 분포

	선거전	선거후	(참의원)
자 민 당	211	239	(108)
신 진 당	160	156	(68)
민 주 당	52	52	
사 민 당	30	15	(36)
공 산 당	15	26	(14)
사 키 가 케	9	2	(4)
자 유 연 합	2		(2)
신 사 회 당	2		(3)
민 주 개 혁 연 합	2	1	
新 綠 風 會			(5)
三 院 클 럽			(4)
참 원 포 럽			(3)
무 소 속	10	9	(3)
(공 석)	18		(2)
총 의 석 수	511	500	(252)

IV. 하시모토 2次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

1. 向後 政局 展望

- 중의원 총선 결과, 제1당이 된 자민당(239석)과 하시모토 류타로(橋本龍太郎)총리는 과반수(250석) 확보에 실패했으나 향후 친여 보수세력을 규합, 자민당 단독정권을 구성할 것으로 보임.
- 자민당의 안정정권을 위한 1차목표는 중의원에서 2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세력이 독점하여 안정 다수의석(265석)을 확보하는 것임.
 - 이는 22개 정부부처를 11개로 통·폐합하는 파격적인 행정개혁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안정정권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.
- 자민·사민·사키가케는 연립내각 구성을 전제로 한 정책협의회를 개최(10.28)하였으나 기업의 정치헌금 즉각폐지, 국내외 일제 침략전쟁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명시 등 사민당이 주장한 기본정책에 자민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합의에 실패한 바 있음.
- 자민당은 중의원 239석(총 500석), 참의원 110석(총 252석)으로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으나 어느 정당과도 연합하지 않는 공산당(중의원 26석)을 제외할 경우, 중의원 실질 과반수 의석(238석)이 되기 때문에 무소속·탈당세력을 영입하면 단독으로 정국

을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.

- 사민·사키가케는 자민당의 소수 단독정권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과 사안별 閣外 정책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므로 향후 정국불안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2. 對內政策 展望

○최대 쟁점이었던 소비세 문제는 자민당의 승리에 따라 예정대로 1997년 4월부터 현행 3%에서 5%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(<표 4> 참조), 이중 1%는 심각한 적자인 지방재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1%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 예산에 쓰일 것으로 예측됨.

○또한 현재 일본의 재정 적자규모는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메우고 부양책을 쓰기 위해 발행해 온 국·공·지방채로 240조 엔을 넘는다는 추산에 따라,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수 삭감, 중앙 성·청 통폐합 등 행정개혁이 단행되고, 1997년을 재정 구조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아래 「재정재건법」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.

○이 밖에도 대장성 개혁, 일본은행 독립성 강화, 지주회사설립 허가로 대표되는 규제완화·철폐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음.

- 특히 구조개혁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는 기업과 민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나타나는 '규제피로'를 방지할 수는

없다는 세계의 위기인식을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.

○그러나 문제는 자민당이 사민당, 사키가케, 무소속, 신진당 이탈 세력 등과 연대(關外 협력)를 하지 않을 수 없어 과거 연립정권 때처럼 '총론은 찬성, 각론엔 반대'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이 지지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.

<표 4> 자민당의 경제공약

	내 용
재정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정재건법 재정 검토 · 특수법인과 재정투융자제도 개선 ·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
세제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세율 5% 인상 · 법인세 인하 검토, 토지보유과세 개선
행정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省廳 수를 반으로 축소·재편성 · 대장성의 은행·증권국 통합 및 금융검사·감사 기능의 분리·독립, 일본은행법 근본적 개정 · 공무원 수 감축 · 외부인에 의한 정책의 평가·감시제 도입
경제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경정 예산 조기 편성, 공공사업 추가 실시 · 중소기업 진흥 주력 · 정보화와 신규사업의 진흥 촉진 · 산업공동화 방지위한 고용대책 마련
산업구조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벤처기업 투자촉진 세제도입 · 파견근로제·직업소개 사업의 자유화 등 규제완화 · 금융·자본시장제도 근본 개혁
대외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계무역기구(WTO)하에서의 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 · 아·태지역과의 협력체제 추진 · 환경 인구 난민 에이즈 등 지구촌문제 해결 전력

3. 對外政策 展望

○ 하시모토 류타로 2차 내각의 성격을 띄게 될 자민당 단독정권은 미·일 안보동맹을 축으로 아·태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됨.

○ 자민당은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수 의석에는 못미친 만큼 평화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- 그러나 1차 하시모토 내각 때와는 달리 사민당(舊사회당)의 패배로 여권내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음.

-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와 오자와(小澤) 신진당 당수는 모두 '일본의 국제적 공헌증대를 위한 개헌'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양당이 연합하는 경우 개헌선인 중의원 2/3를 상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.

○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 공약으로 ① 센카쿠(尖閣)열도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, ② 일본 주변의 유사시에 적극 대응, ③ 유엔 평화유지활동(PKO) 협력법 개정, ④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제시하였는 바, 이에 대한 주변국들과 갈등이 예상됨.

-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을 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수의 외교사안 가운데서 공약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영토 팽창주의를 노골화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로

해석됨.

- 주변 유사시 대응이란 특히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PKO협력법의 개정도 현행법상의 평화유지군(PKF)의 참가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일본 자위대가 초현대화된 세계 유수의 강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, 군사 강대국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와 우려가 예상됨.
-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외교대국 실현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개도국들에 대한 선심성 경제원조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가입 지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.

○또한 역사인식과 관련, 자민당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공약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이 침략임을 부정하기 위한 것임.

-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사에 대해 서슴없이 망언해 온 오쿠노 세이스케(奥野誠亮), 에토 다카미(江藤隆美) 등이 모두 당선됨으로써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.

○이번 일본 총선으로 인해 한·일관계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,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에 대해 망언해 온 오쿠노 세이스케 의 당선 등으로 한·일관계가 불편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- 자민당을 핵심축으로 탄생할 소수 단독정권이 보수우경화 노선을 걷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, 60~75% 정도였던 보수계 비율이 이번 총선에서 80%로 높아짐에 따라 우

- 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보수층을 겨냥한 선거공약으로 풀이되나, 향후 일본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면 양국관계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 - 일본의 역사 인식 대목과 관련, 그동안 망언을 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당선되고 신사참배까지 공약화한 자민당 내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, 이러한 망언은 주기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.
-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더욱 강화된 보수정권을 기반으로 독자성을 발휘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.
- 하시모토 2기 정권은 대북한정책에서 한·미·일 3국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한·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등 기존의 친한국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, 대북 경제지원과 경수로문제 등에서 독자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이 경우 대북문제에서의 긴밀한 한·미·일 공조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V. 韓國의 考慮事項

- 한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, 첫째,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하시모토 총리는 '정당과 정부정책과는 별개'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(10.1) 한국은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냉정히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나 실효면에서 한국 고유의 영토임.
 - 일본은 독도문제에 있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식을 주기 위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음.

- 둘째, 한일 과거사문제와 관련, 가장 중요한 근본원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.
 - 과거청산문제 자체를 공식외교의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것은 외교적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앞장서기 보다는 학자, 민간운동가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들을 후원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.

- 셋째, 북한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과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, 일·중·러 3개국이 상호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◎ 發刊資料目錄 案內 ◎

<세미나시리즈>

- 91-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
- 91-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: 實相과 展望
- 91-03 北韓體制的 變化: 現況과 展望
- 92-01 南北和解·協力時代, 우리의 座標와 課題
- 92-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
- 92-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
- 92-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
- 92-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: 現況과 展望
- 93-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
- 93-02 北韓 核問題: 展望과 課題
- 93-03 中國의 改革·開放
- 93-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
- 93-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
- 94-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
- 94-02 南北韓關係와 美國
- 94-03 예멘 統一의 問題點
- 94-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
- 94-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
- 94-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
- 95-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
- 95-02 남북화해·협력의 실천지표: 「민족발전공동계획」
- 95-03 金正日 政權의 向方
- 95-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'96年 政勢 展望
- 96-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

〈研究報告書〉

- 91-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
- 91-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
- 91-03 美國聯邦制 研究: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
- 91-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
- 91-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: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
- 91-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
- 91-11 在野統一案 研究
- 91-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: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(I)
- 91-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
- 91-14 「한민족공동체」具體化方案 研究: 社會·文化·經濟 交流·協力 中心
- 92-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
- 92-02 中國의 改革·開放 現況과 展望: 北韓의 中國式 改革·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
- 92-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: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
- 92-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: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(II)
- 92-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
- 92-06 軍備統制 檢證 研究: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
- 92-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
- 92-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
- 92-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
- 92-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
- 92-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
- 92-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: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

- 92-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
- 92-14 南北韓 社會·文化共同體 形成方案: 社會·文化的 同質性 增大
方案 中心
- 92-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
- 92-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
- 92-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
- 93-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
- 93-02 金日成著作 解題
- 93-03 日本의 對北韓政策
- 93-04 中國의 改革·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: 1990年代 東北亞秩序
豫測(IV)
- 93-05 中·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
- 93-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:
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(III)
- 93-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
- 93-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
- 93-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
- 93-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·러시아 關係
- 93-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
- 93-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
- 93-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
- 93-15 金正日著作 解題
- 93-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: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
관련하여
- 93-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
- 93-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
- 93-19 예멘 統合事例 研究
- 93-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: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
- 93-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

- 93-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
- 93-23 社會主義體制 改革·開放 事例 比較研究
- 93-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(改訂版)
- 93-25 「한민족 공동체」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
- 93-26 日本의 核政策
- 93-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
- 93-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
- 93-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
- 93-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~1993
- 94-01 북한 관료부패 연구
- 94-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
- 94-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
- 94-04 中·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
- 94-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
- 94-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
- 94-07 金正日 리더쉽 研究
- 94-08 北韓 民族主義 研究
- 94-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
- 94-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
- 94-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
- 94-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
- 94-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
- 94-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
- 94-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
- 94-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
- 94-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
- 94-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: 亞·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
- 94-20 「조선전사」 解題
- 94-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

- 94-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: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
- 94-24 韓國 民族主義 研究
- 94-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: 黨·軍關係의 變化와 關聯
- 94-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
- 94-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
- 94-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
- 94-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
- 94-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
- 94-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
- 94-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
- 94-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
- 94-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
- 94-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·協力增大 方案 研究
- 95-01 리·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
- 95-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
- 95-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
- 95-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
- 95-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
- 95-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-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-
- 95-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
- 95-09 韓·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
- 95-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: 持續과 變化
- 95-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: 미·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
- 95-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-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-
- 95-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-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
- 95-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

- 95-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: 중국·베트남과의 비교
- 95-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
- 95-18 北·美關係와 韓·美關係 變化展望
- 95-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(Ⅲ): 「근로자」 해제
- 95-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
- 95-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
- 95-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
- 95-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: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
- 95-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
- 95-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
- 96-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
- 96-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
- 96-03 동·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
- 96-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
- 96-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·협력 방안 연구: 다자적·양자적 접근
- 96-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
- 96-07 韓·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
- 96-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

〈統一情勢分析〉

- 91-01 韓·蘇, 日·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: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
- 91-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
- 91-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: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
- 91-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(IPU) 平壤總會 結果分析
- 91-05 中·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
- 91-06 北·日, 北·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
- 91-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

- 91-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
- 91-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
- 91-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
- 91-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
- 91-12 美·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
- 91-13 美·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
- 91-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
- 92-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: 南·北韓關係와 관련하여
- 92-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
- 92-03 中國의 改革·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
- 92-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·러關係 展望
- 92-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: 1992年 上半期
- 92-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
- 92-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: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
- 93-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: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
- 93-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
- 93-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3.1~6)
- 93-04 <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>과 北韓의 對南政策
- 93-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
- 93-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3. 7~9)
- 93-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
- 93-08 第5次 亞·太經濟協力體(APEC)會議를 계기로 본 亞·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
- 93-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
- 94-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: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
- 94-02 中國의 對北韓政策: 現況과 展望
- 94-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: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

- 94-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·外政策 展望
- 94-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
- 94-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
- 94-07 韓·日, 韓·中 頂上會談 結果分析
- 94-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4.1~3)
- 94-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
- 94-10 韓·日關係 定立方案: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
- 94-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
- 94-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
- 94-13 무라야마(村山)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
- 94-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4.4~6)
- 94-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
- 94-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4.7~9)
- 94-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
- 94-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
- 94-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
- 94-20 核·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
- 95-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
- 95-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(1995. 1~3)
- 95-03 中國의 政局展望: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
- 95-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
- 95-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
- 95-06 金日成 死後 1年: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
- 95-07 「조·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」 廢棄의 意味와 評價
- 95-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
- 96-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: 2·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
- 96-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: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
- 96-03 北韓의 對美·中政策 懸案과 展望
- 96-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

- 96-05 러시아大選結果分析
- 96-06 金日成 死後2年: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
- 96-07 나진-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
- 96-08 日本總選 結果分析

〈世界主要事件日誌〉

- 91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4. 1 ~ 1991. 6. 30)
- 91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7. 1 ~ 1991. 9. 30)
- 91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1. 10. 1 ~ 1991. 12. 31)
- 92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1. 1 ~ 1992. 3. 31)
- 92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4. 1 ~ 1992. 6. 30)
- 92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7. 1 ~ 1992. 9. 30)
- 92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2. 10. 1 ~ 1992. 12. 31)
- 93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1. 1 ~ 1993. 3. 31)
- 93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4. 1 ~ 1993. 6. 30)
- 93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7. 1 ~ 1993. 9. 30)
- 93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3. 10. 1 ~ 1993. 12. 31)
- 94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1. 1 ~ 1994. 3. 31)
- 94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4. 1 ~ 1994. 6. 30)
- 94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7. 1 ~ 1994. 9. 30)
- 94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4. 10. 1 ~ 1994. 12. 31)
- 95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5. 1. 1 ~ 1995. 3. 31)
- 95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5. 4. 1 ~ 1995. 6. 30)
- 95-03 世界主要事件日誌(1995. 7. 1 ~ 1995. 9. 30)
- 95-04 世界主要事件日誌(1995. 10. 1 ~ 1995. 12. 31)
- 96-01 世界主要事件日誌(1996. 1. 1 ~ 1996. 3. 31)
- 96-02 世界主要事件日誌(1996. 4. 1 ~ 1996. 6. 30)

〈年例情勢報告書〉

-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1~1992
-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2~1993
-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3~1994
- 94-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
- 94-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4~1995
- 95-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: 1995~1996

〈論叢〉

- 統一研究論叢 創刊號(1992. 6)
-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(1992. 12)
-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(1993. 7)
-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(1993. 12)
-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(1994. 8)
-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(1994. 12)
-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(1995. 8)
-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(1995. 12)
-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(1996. 7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1(1992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2(1993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
edition(1993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3(1994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
edition(1994)
-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. 4(1995)

한독 WORKSHOP :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(1993)

한미 WORKSHOP : US-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(1994)

〈資料〉

- 92-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(國文篇)
- 92-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(外國語篇)
- 93-01 藏書目錄: 單行本·研究報告書
- 93-02 藏書目錄: 特殊資料
- 93-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
- 94-01 貨幣·經濟·社會統合에 관한 條約(上)
- 94-02 貨幣·經濟·社會統合에 관한 條約(中)
- 94-03 貨幣·經濟·社會統合에 관한 條約(下)
- 95-01 藏書目錄: 單行本·研究報告書(追錄I)
- 95-02 藏書目錄: 特殊資料(追錄I)

〈통일문화시리즈〉

- 94-01 統一文化研究(上)
- 94-02 統一文化研究(下)
- 95-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(上)
- 95-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(下)

日本總選 結果分析

統一情勢分析 96-08

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

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

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-19

전화: 232-9252, FAX: 235-5270

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: 266-0892

印刷日 1996년 10월 일

發行日 1996년 10월 일
